

실물 흡사 칼·총...광주 무인문구점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일부 제품 ‘만 14세 이상 이용’ 불구
누구나 구입 가능...KC 마크도 없어
관리·단속 권한 불분명 학부모 불안

광주 지역 무인 문구점에서 실물과 흡사한 모형 무기류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북구 본촌동 한 무인 문구점에는 총과 칼 등의 모형 장난감이 곳곳에 진열돼 있었다. 개중에는 ‘S&W(스미스&웨슨) 6906’ 등 실물과 외관이 흡사한 것도 다수였다. 도검류 장난감의 경우 재질은 플라스틱이었으나, 날 끝은 종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이 탓에 사용 중 위험이 우려되는 일부 제품에는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문제는 제품 모두 별다른 시건 장치가 없었고 무인 매장 특성상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같은 날 오후 남구 봉선동의 무인 문구점 역시 총·칼 모형 장난감이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전시된 상태였다.



24일 광주 북구 본촌동 한 무인 문구점에 실물과 흡사한 총·칼 등의 무기류 장난감이 별도 안전장치 없이 진열돼 있다. 일부 제품에는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기돼 있으나, 누구나 구입 가능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점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적잖이 충격이었다”며 “과자나 학용품이야 아이들이 스스로 구매하면서 교육 효과도 있겠지만, 다칠 수도 있는 장난감의 경우 예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60대)씨도 “장난감이라곤 하지만, 얼마든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인데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놀랍다”며 “대놓고 눈에 띄는 유해업소가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무인 문구점은 자유업이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을 가능하다”며 “행정 당국에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어렵고, 단속을 실시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어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경우 식품을 판매하는 곳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나가긴 하나, 장난감이나 문구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관이 아닌 만큼 나서기가 어렵다”며 “현행 제도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안 여객선 좌초 당시 ‘항로 이탈 알림’ 꺼져 있었다

해경, 경위 파악...규정 위반 여부도
선장 상대론 “지휘 소홀” 진술 확보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가 좌초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선 ‘항로 이탈 알림’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퀴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목포 VTS 소속 관제사 A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항로 이탈 알림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다.

다만, 이탈 알림을 끈 게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초에 꺼져 있었으며 소형 어선의 항로 이탈에도 알림이 울려 업무에 방해가 됐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퀴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명백해질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또 항로 이탈 알림이 어떤 경위로 꺼지게 된 것인지 파악하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퀴제누비아2호 선장 B(60대)씨가 평소에도 지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해상은 좁은 협수로라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나 당시 B씨는 선장실에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여태 비밀비재했다는 것이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목포해경은 앞서 구속된 일동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목포=정혜진 기자

‘선거법 위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행

광주·전남 21대 대선 수사 마무리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광주 한 식당에 기부 행위를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 4

월15일 지역 소외계층에게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한 음식점에 사비로 식재료를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당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때고, 한 전 총리가 음식점 후원으로부터 보듬어 만인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이다. 이 행위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 판단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송치를 끝으로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수사를 마쳤다.

광주경찰청은 30건(42명)을 수사해 20건(21명)을 검찰에 넘겼고 18건(20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56건(99명)을 수사한 끝에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재영 기자